‘공공외교·기업유치’ 유럽 출장길

김관영 도지사,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독일 · 네덜란드 방문
농생명 · 수소 · 탄소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교류 확대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서 최신 기술 · 바이오산업 접목 모색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교류 지역을 확대하고 공공외교·농생명·기업유치 등 다양한 일정을 위해 유럽 출장에 나선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 등 출장단은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5박 7일 간 일정으로 독일(작센주, 베를린, 자를란트주)과 네덜란드 출장길에 오른다.

출장단은 방문 첫날 네덜란드에서 지속가능 연합(Dutch Sustainable Growth Coalition), 네덜란드 생명과학 클러스터(Leiden Bio Science Park)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 분야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잠재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서 레이던 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특별한 문화 이야기’란 주제로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을 펼칠 계획이다.

1575년 개교,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알려진 레이던 대학은 서유럽 최초로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다. 1989년 한국어학과를 정식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공공외교 한마당에는 200여명의 학생, 교수가 참석해 전북의 문화를 주제로 도지사 특강, 판소리, 서예 강좌가 진행된다.

9월 4일에는 독일 작센주를 방문해 양 지역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한다. 독일과의 의향서 체결은 전북자치도 첫 번째 유럽 국가와의 교류로 양 지역은 수소, 탄소, 문화,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지역은 실질적인 성과를 견인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해 도, 관련기관, 대학, 연구단체 등 필요한 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출장단은 교류의향서 체결 이후 우선 교류 분야인 작센수소연구소(IKTS) 및 마이센 국립 도자기 제작소, 드레스덴 공과 대학 등 양 지역 교류 관련 기관을 견학하는 등 분야별 교류에 대한 의견 교환의 시간도 가진다.

이후 베를린으로 이동, 베를린 거주 파독 광부, 간호사와 간담도 추진한다. 독일에는 5만여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베를린에는 20%가량에 해당하는 1만명이 거주, 그 가운데 파독 광부와 간호사는 6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일 파독 광부, 간호사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간담에는 약 150명을 초청해 판소리공연, 서예 퍼포먼스, 한지 공예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임승식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발의로 파독 광부, 간호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번 간담을 계기로 동포 2세 초청 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와 환경을 최적화한 컨셉으로 설립된 Euref Campus를 방문해 에너지 산업의 혁신과 소통을 주제로 전북자치도와의 협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독일 통일을 이끈 빌리브란트 재단도 방문한다.

출장단은 9월 6일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인 IFA를 방문하여 최신 기술 트랜드와 스마트 헬스 기기, IoT기반 최신 기기 등을 직접 확인한다. 전북 바이오 산업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하고 참여 글로벌 기업과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곧바로 자를란트주 자르브뤼켄으로 이동해 KIST 유럽연구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바이오 기술협력센터(JB-GBC 센터)’ 개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 바이오 산업의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서의 도약을 하고자 오는 9월 6일, 독일 자를란트주 자르브뤼켄에 위치한 KIST 유럽연구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바이오 기술협력센터(JB-GBC 센터)’ 개소식을 진행한다.

도는 JB-GBC 센터 개소를 통해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자리매김하여 전북 지역의 바이오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같은 날 저녁에는 유럽 최대 철강기업이자 모빌리티분야 글로벌기업인 ThyssenKrupp, 자동차 변속기로 유명한 ZF 등 모빌리티 바이오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 약 50여개 기업 및 관련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북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단은 7일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을 마지막으로 귀국한다. 이번 공공외교 한마당에서는 전북이 한상 가득 차려놓은 다양한 문화의 잔치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펼칠 예정으로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푸근하고 따뜻한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비용 · 편익 분석 선행돼야”

민주 윤준병 의원, 尹 국정브리핑 ‘저출생 대응’ 관련
“사회적 비용 등 산출 통해 국가재정 부담 허용 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밝힌 저출생 대응과 관련,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등 컨트롤타워(추진조직) 정비도 중요하지만, 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가치 등 저출생 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비용·편익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저출생 정책은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국가적 의제”라며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약 3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에 따른 사회적 편익·비용 분석의 부재로 저출생 극복과는 관련 없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거나 부처간 사업 중복, 단편적인 정책 답습 등에 그치면서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저출생 대응 명목예산은 47조원이었지만, 저출생 극복과 관련된 직접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재분류했을 경우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은 23.5조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은 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가치 등 저출생 정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없이 기존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23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저출생 고령화 추세 국제 비교와 정책 시사점’을 기반으로 출생아 1명의 경제적 (현재)가치를 21억원으로 추산한 분석이 제시된 바 있다. 반면, 출생아 1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체계적으로 비교 추계한 자료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현재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정비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높이 평가한다”며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출생아 1명당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 등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저출생 정책의 국가재정 부담 허용범위 추계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그동안 답습했던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출생이 국가에 기여하는 편익은 얼마이며, 출생을 위해서 정부와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면밀히 따져 저출생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멘텀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자치도,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폭력예방교육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도청 공연장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실국장 등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한 예방강화 및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함양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고위직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직원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급까지 확대했다.

강의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인 양동옥 한국젠더문화연구원 원장이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 조직 내 성희롱 등 사례와 원인분석 등에 대해 2시간 동안 진행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간부라면 엄격해야 한다”며,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올 하반기 감사역량 강화 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감사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한 감사 품질을 향상하고, 감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 하반기 감사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감사역량강화 교육은 본청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 감사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1, 2차로 나눠 진행됐다.

1차 교육은 감사위원회 김진철 사무국장이 공공 감사의 전제조건 및 특정감사 사례분석 내용으로, 2차 교육은 감사원 유종남 전 국장을 초빙해 실무위주의 감사 처분 사례 등을 중점으로 진행했다. 강의 후 감사 진행 중 느끼는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며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시·군, 출자·출연기관 감사 담당 공무원들의 연찬 기회가 적어 애로사항이 많다는 자체 판단과 최근 인사이동에 따른 감사위원회 신규 직원의 실무역량 강화 및 변화된 감사 흐름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평가에 따라 실시됐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국회단계 대응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서자고 강조하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 ‘국회대응 체제’ 전환

전북자치도, 대응전략 회의 개최… 도정 중점사업 · 시군 지역균형 고려 70개 핵심사업 선정
사업별 쟁점 논리 보강 · 선택과 집중 등 전략 마련… 김 지사 “내년 예산 확보, 전북 미래 좌우”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가 2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국회단계 대응전략 회의를 개최하며 성공적인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또 한 번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회의는 내년 전북자치도의 주요사업 예산을 국회단계에서 추가 확보하기 위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 한발 앞서 국회단계 대응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실국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회단계에서 대응할 핵심사업을 선정했으며, 사업별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전략 또한 심도있게 논의됐다.

먼저,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되었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70개 핵심사업을 엄선해 ‘선택과 집중’ 하기로 했다. 중점사업은 도정 핵심 사업을 담았으며 시군 안배를 통한 지역 현안 사업들도 포함, 시군간 균형발전 방안도 고려했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 대응을 위한 전략도 논의됐다.

전북자치도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끝나자마자 부처를 통해 사업별 미반영 사유를 파악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동안 파악한 사업별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사업논리 보강 및 기재부 등 중앙부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이 논의 됐다. 이날 논의된 사업들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국회 예산심사를 마칠때 까지 국회의원 및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도-시·군 국회 합동 대응반’을 운영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2025년 국가예산 확보는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며, “국회 단계에서 총력 대응해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자”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내년 국비 확보 등 청취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중열) 위원들은 27일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국가예산확보 및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날카로운 현안 점검을 통해 시정의 발전 방향과 시민의 복지 향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손중열 위원장은 남원 방문 관광객들의 성향, 계층 성비 등의 빅데이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오창숙 부위원장은 체련 기구설치 관련 타 지자체에서 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길수 위원은 1일 1가구 소통행정 사업을 통해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과 같은 복지위기가구에 대해 세심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고, 오동환 위원은 춘향제 기간 중 외부 관광객 대상으로 입장료를 받고 일정 금액을 남원사랑 상품권으로 반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정현 위원은 혼불문학관 내부 공간 활용에 대해 고민할 것과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촉구했으며, 강인식 위원은 금암봉-함파우 사이에 시설한 육교 활용을 위한 보행로 조성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미선 위원은 시민소통위원회의 청년 희망 분과 선출 기준을 묻고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김슬지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슬지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는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히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조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전북자치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슬지 도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지역소멸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을 장려함으로써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부모 맞돌봄 문화가 정착되고, 출생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제 지방도 위험도로 현장 민원 청취

나인권 도의원, “조속한 사업 이행 · 마을주민 의견 반영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29일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에 있는 지방도 702호선 중 마을을 지나는 사고위험지점을 직접 방문해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선형 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구간은 도로 주변 보행로 및 갓길 없이 2차선 도로만으로 이루어져 도로 폭이 좁은 편인 데다 곡선 커브도 심해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 특히 현재 공사 중인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차량의 주도로로 사용되며, 대형 트럭이 수시로 지나고 있어 마을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나 의원은 이날 마을주민과 마을관계자의 민원을 청취한 데 이어 해당 지점의 사업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설명과 입장을 공유해 서로 소통하도록 조율했다.

나 의원은 “이 도로뿐만 아니라 도에서 관리하는 모든 지방도의 도로 확장과 선형 개선 사업의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며, “노선 결정 등 공사 진행 전 과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필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통안전 및 도로설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지금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안전 중심 도로설계를 적극 반영할 것”을 도로관리사업소 측에 주문했다.

지방도 702호선 김제 진봉면 고사리 일원 선형 개선 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